



# 한국형 경수로 양보할 수 없다

정종문

동아일보 논설위원실장

북한은 한국형 경수로를 가르켜 있지도 않은 「유령」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형 원자로는 과연 그들의 말처럼 유령인가. 북한과 핵협상을 벌인 미 행정부의 관리들도 불과 얼마전까지 한국형의 존재를 잘 몰랐다. 그들이 파악하고있던 한국형은 미국 기술에 한국 기술을 다소 가미한 영광 3, 4 호기였다. 미국조차 이런 마당에 북한이 한국형 표준원전을 유령이라고 우겨대는 것은 어떻게보면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1,000MW 짜리의 한국형 경수로로는 엄연히 있다. 현재 건설중인 울진 3, 4호기다. 한국형 원자로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기준은 기술특성과 계약상의 위치, 설계와 제작을 담당하는 주체, 생산품의 최종책임 등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분명하게 한국 고유의 원자로형을 갖고 있다고 한국원자력연구소 이병영 원전사업부장은 지적했다. KSNP로 약칭되는 한국표준형원전이다. 그것은 한국 기술진의 각고끝에 얻어진 값진 산물이다.

물론 한국형의 기본 기술은 미국의 컴버시켄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수입했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진들은 한국의 지질 특성과 부지조건, 근해, 바닷물 온도, 한국인의 체형 등을 고려한 100여가지의 설계 변경을 통해 이를 한국의 독자적인 고유 모델로 바꿔놓았다. 이처럼 한국 기술진이 개발 또는 개량한 기술자료의 소유권은 한국에 있다. 이같은 계약조건은 한국이 설계하고 제작한 원전

은 외국수출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않음을 뜻한다.

한국형 경수로로는 한국의 기술로 설계해서 한국의 공장에서 만들어 한국기술진들의 책임아래 시공된다. 완성된 원자력발전소의 성능과 안정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국이 진다. 이는 생산품의 최종책임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기술도 일선에 맡기는 라이선스 프로덕트 형태가 아님을 말한다. 건설중인 울진 3, 4호기는 설계 제작 시공과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최종책임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모든 것을 한국이 담당하고 아울러 수출에도 아무런 제약조건을 받지않는 한국고유 모델의 한국형경수로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형 경수로로는 존재하지도 않고 안전성도 믿을 수 없다고 강변하면서 한국형 경수로를 거부하고 있다.

거부의 강도가 거세다. 그래서 4월 21일로 예정된 경수로 계약협상이 깨질 위험조차 생겼다.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거부하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은 한국형에 대해 「유령론」을 펴고있지만 속사정은 딴 곳에 있다. 그에 대한 해석은 여러갈래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첫째는 자존심 문제다. 그들로서는 한국

형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경수로를 받아들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남한 기술위상의 충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평양의 지하철 건설때도 중국의 지원사를 숨겼었다. 막상 지하철 준공식에는 평양에 거주하거나 지하철공사에 참여한 모든 중국인들을 교묘하게 따돌리고 북한의 요인들만 참석해 그들 자력으로 평양의 지하철을 완성했다고 선전했다. 이같은 선례로 미뤄보아 북한이 남한의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체역량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심각한 모순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둘째는 남한 기술진과 물자의 북한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할 수 있다. 경수로 공사에는 약 5천명의 인원이 투입돼야 한다. 그들 모두가 남한인입은 당연하다. 이 기술진들은 북한 인력도 동시에 훈련시켜야 한다. 그 경우 북한 사회에 어떤 효과가 파급될지 그들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경수로원전 건설은 약 10년이 걸리는 거대한 사업이다. 북한땅의 외진 구석이기는 하지만 그 오랜 시간동안 북한의 한 모퉁이에서 남한 기술과 경제력이 북한을 지도하고 있다는 현실이 조만간 북한 주민 전체에 알려질 때 그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북한 정권의 사회 정치적 손실은 위험한 도박에 가까울 것이다.

세째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라는 국제공조체제에 대한 반발이다. KEDO는 한국의 중심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KEDO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공식 기구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 경우 경제력이 우세한 한국이 국제 공조체제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담당하는 치명적인 상황을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한다고 그들은 판단할 수 있다. 북한 정권 유시의 에너지인 대남 전략의 지렛대를 상실하는 절대 위기로 그들은 간주한 것이다.

네째는 경수로가 북한이 진정으로 바라는 핵해결책인가 이다. 북한이 처음 북한의 핵활동 동결과 경수로를 교환하는 형식을 제의하고 합의했을 때부터 이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 경수로는 북한이 노리는 다른 것의 비끼일 수도 있다. 가령 특별사찰을 피하기 위한 시간 벌기나 또는 대미 수교와 맞바꿀 수 있는 외교적 죽은 돌로 북한은 또한번 경수로 수용문제를 이용해 보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풀이 이다.

다섯째는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끝내기 위한 수단이다. 이 견해도 경수로가 비끼

라는 분석과 맥을 같이 한다. 북한은 미국이 직접 지원하는 경수로를 통해 북한과 미국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남한을 견제할 수 있는 대미 정치관계를 강화해보겠다는 속셈을 북한은 갖고 있다. 남한을 철저히 배제한 대미 직접협상이 북한의 의도이며 경수로 협상을 바탕으로 남한을 궁지로 몰아가려는 협상 전략을 그들은 구사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형 대신 미국형 경수로를 원하고 있다.

경수로 문제는 북한정권에는 이처럼 진퇴유곡의 난제를 안겨주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제네바 합의에서 1,000MW짜리 경수로 2기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그때만해도 미국조차 한국에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 고유의 1,000MW 경수로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 시점에서 남한이 주장하는 한국형은 유령에 불과하고 결국은 미국이 이를 책임질 것이라고 오판했더라도 부리는 아니다. 북한은 그 오판을 근거로 북미합의의 경수로 조항에 합의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나 그후 미국도 한국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현실인식에 도달했다. 아울러 미국은 심지어 한국에는 한국형 경

수료가 있음을 뒤늦게 알고 한국이 담당해야 할 경수로 지원의 중심적인 역할이 무엇인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본주의 거래 원리에 따라 시설재 차관을 제공할 경우 차관 제공의 주체가 시설재의 내용을 결정하는 관례도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었다. 북한에 지원키로 한 경수로로는 사실상 무이자이자 장기 시설재 차관의 성격을 띄고 있다.

KEDO 설립 규약에 한국형을 명시한 이 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이 약 40억 달러 가운데 약 30억 달러의 막대한 부분을 제공키로 한 이상 한국의 중심적 역할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훼손될 수 없다. 만일 한국의 발언권을 줄이려면 그만큼 한국의 지분을 경감시키면 된다. 그러나 누구도 한국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자청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경수로 제공이라는 국가적 뇌물 제공에 돈을 대려는 의도를 전혀 갖고있지 않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의회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 다음으로 중요 부분을 맡고있는 일본은 어차피 지불해야 할 북한 청구권 자금의 일부를 전용하겠다는 계산아래 KEDO에 참가했다.

결국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체는 한국 뿐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적나라한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측의 태도다. 미국의 언론들은 체네바 북미 핵합의의 전철을 또 밟고있다. 마치 한국이 강경하기 때문에 경수로 협상이 결렬위기에 놓여있고 그래서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위협을 받고있는 것처럼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의 속앓이 때문에 한국형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보다 오히려 그간 미국 일부의 그릇된 시각과 무책임성이 우리에게서 더 큰 분노의 대상이 되고있다.

1년전과 똑같이 한국의 양보를 강요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한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차라리 각본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불러낼 때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를 미국의 진보적인 언론이나 지식인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결과는 월남 패망이었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선상 난민이었고 인도차이나 반도에 피를 뿌린 평화로운 수백만명의 학살희생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철수로 인해 입게된 그 엄청난 비극을 보면서 그 비극에 애도하는 미국의 언론은 별로 없다. 